

## 민주화와 경제성장, 그리고 삶의 질\*

이천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이룩해 경제적 단면에서 어느 정도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삶의 질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민주화도 삶의 질의 비경제적 요소 중 하나이다. 때문에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도 이루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것은 어느 정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난 연후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로 되기 전까지는 환경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노력한다거나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나 불공정경쟁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또는 기왕의 경제발전의 주된 역군이었던 대기업이나 이른바 재벌들에 대해 지나치게 제약을 가하는 것 등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는 듯 보인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화를 다소 지연시켜도 좋다고도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한 태도는 선진국에서 보이는 균형된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노력과 대비되는 것이며, 92년 환경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공식화된 단순한 경제성장 대신에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추구해 보려는 성향과도 크게 다른 것이다.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비물질적·정신적 가치에 대한 욕구가 그러한 물질적 성장의 정도 이상으로 가속화되어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지방분권에 따르는 과도한 지역이기주의의 추구도 자제될 것이고 민주주의가 좀더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환경, 복지, 소득분배, 노사관계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념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세대간 인구구조가 바뀌고, 상대적으로 유복한 상태에서 태어났으나 현상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경제적 재화는 좀더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좀더 커지게 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이른바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경쟁라운드 등으로 밖으로부터 압력이 있게 되고 우리 생활의 여건이 바뀌게 됨에 따라 이전의 성장제일주의적 사고방식과 그것을 밑받침하는 제도를 고수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1995년도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 영역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1. 서론: 문제의 초점

삶의 질 문제는 1960년대 이래 구미에서 대두한 문제이다. 이때 구미에서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의료, 복지, 정치적 자유 등 삶의 질을 규정하는 경제 외적 여러 요소들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경제성장에 상응하게끔 늘어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모두 총괄하는 삶의 질의 요인들을 새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생겼고 그로부터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때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제고 방도에 대한 논의는 본원적으로 경제성장 중심적 사회발전논리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을 보면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 사이에는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년에 들어와 우리 나라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규정하는 비경제적 요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상충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라리 그들이 이루는 보완관계의 단면을 더 중시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이룩해 경제적인 단면에서 어느 정도 소비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삶의 질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민주화도 삶의 질의 비경제적 요소 중 하나이다. 때문에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도 이루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난 후에야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여기고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삶의 질의 개선이 민주화의 선행조건 또는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로 되기 전까지는 환경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노력한다거나 소득의 불공평한 분배나 불공정 경쟁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 또는 이전에 경제발전의 주된 역군이었던 대기업 또는 이른바 재벌들에 대해 지나치게 제약을 가하는 것 등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 않는 듯 보인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민주화를 다소 지연시켜도 좋다고도 생각할 법하다.

물론 우리 나라 사람들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삶의 질이 자동적으로 고양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중시하는 나머지 그것의 부작용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설사 삶의 질의 비경제적 요소를 결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여기고 상당한 정도 수용하려고 한다. 인간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욕구를 계단(hierarchy)의 개념을 이용하여 고려해 볼 때 제1단계의 생리욕구가 과거 흡족스럽게 충족되지 못하였던 것이 크게 작용했음인지 생리욕구의 충족이라는 기본에 대해서는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서 생리욕구 이상의 여러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선진국에서 보이는 균형된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노력과 대비되는 것이고, 92년 환경회의를 분기점으로 하여 공식화된 단순한 경제성장 대신에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추구해 보려는 성향과도 크게 다른 것이다.

이렇게 경제제일주의 혹은 성장제일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은 지난 35여년 간 전개되어 온 홍보활동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나아가 이것은 이른바 곳집이 차야 예절을 안다고 보았던 우리 사회 전통적 관념의 반영일 수도 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경제발전을 이룩해낸다는 것이 공평한 법제의 운영이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경제제일주의적 사고방식은 최근 상당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누리게 되면서 다른 가치들의 중요성도 점차 인식하게 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과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새로이 평가하게 되었으며,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이 인간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근본문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본질적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시설이나 통신시설을 이용하다가 봉착하는 갖가지 구체적 어려움에 대한 실제 체험 등은 점차 경제중심적인 삶의 질에 대한 생각을 수정하게 되었다.

## 2. 경제제일주의의 원인, 공과(功過)와 현재 의식의 불분명성

우리의 경제제일주의는 이른바 압축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단시일내에 고속성장을 이루는 것, 특히 GNP나 수출규모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지표를 극대화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게 되면서, 이를 위한 최선의 방도를 추구해 오는 이면에서 그것으로부터 유래하는 부작용을 적당히 무시하고 외면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환경파괴나 지역간 불균형과 같은 부정적 문제들은 무시한 채 경제성

장에만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서울과 일부 공업지역으로 인력과 시설이 몰리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들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사회와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시설이 아닌 다른 종류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소홀하게 취급받았다. 40대 남성으로 대표되는 개발역군들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나쳐 이들의 사망률을 세계 제일로 이끌어 갔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시된 채 이들 40대들은 경제적 부의 창출에 일로 매진하게끔 내몰렸다. 그에 따라 이들이 별로 중시하지 않았거나 그럴 여유가 없어 경시했던 비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은 어렵게 되었으며 외롭게 고군분투를 한 소수도 별 결실을 맺을 수는 없었다.

그러다가 경제성장의 후유증이 서서히 그러나 좀더 본격적으로 인지됨에 따라 이러한 성장 일변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컨대 점차 심각하고 분명하게 대두되고 있는 각종 공해문제를 외면하고는 지속적 사회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과 값진 역사 유산을 방치하는 것이 단순히 문화적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른바 문화적 인자에 기반하는 경쟁력 제고의 길을 봉쇄하는 것으로까지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특히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 물질생산의 증대를 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여러 가지 삶의 질의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삶의 본체를 밝혀야 하며 그런 것 모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상당 정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근년의 이러한 사고변화가 반드시 분명한 것만은 아니다. 우선 이러한 변화는 아직 관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행동차원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예컨대 우리 사회에서는 비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환경보호운동에 시간을 쏟는다든지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한 형편인데, 이런 것이 관념과 행동 사이의 격차를 보여 준다.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과 비경제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요인으로서 상충하게 되는 경우 사람들의 생각은 이들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연히 선택하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삶의 질에 관련된 비경제적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한 기업의 주변 사회에 대한 기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가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참여도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사회에는 공동체

의식이 제대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개인들이 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한다는 의식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민주화가 진전되더라도 그것이 삶의 질의 여러 단면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지난 3, 4년의 민주화가 미친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개인의 경제생활에 대해서 별 괄목할 만한 효과를 가졌다고 여기지 않고 있으며, 고용기회의 확충에도 별 기여를 한 바 없으며, 자아실현을 돕거나 가정생활을 화목하게 하는 측면에서도 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화는 단지 과소비풍조에 대해 억제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정부의 운영을 다소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차원에서 혹은 정적·부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로 인지되고 있다.

지난 수년 민주화의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다소 바뀌었다 하지만 그것이 경제생활이나 거시경제의 여러 양상에 대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단 물가문제만은 전보다 악화되었다고 여기고 있다. 개혁조치의 대표적 조치인 공직자사정이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평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효과는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장차 비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며 세금이 다소 늘어날 것이지만 그런 범위내에서 경제가 다소 나아지고 개인생활도 윤택해지며 소득분배도 다소 개선될리라고 보고 있다. 특히 월소득 150만원 이상의 상대적 상류층 및 50대 이상의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낙관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후 실생활에서 큰 개선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으나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욕 등을 감안하여 장래를 낙관하고 점진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 조금해 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경제적 요소를 더 중시하고 비경제적 요소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지만, 근년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사고경향의 문제점이 인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성이 반드시 확실하거나 명료한 것은 아니다.

### 3. 민주화 후에도 성장제일주의의 잔재를 보이는 몇 가지 예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특히 지난 2년여 간 국제화니 세계화니 하는 구호가 도도하게 주창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든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경쟁력의 제고라는 의미에서 경제제일주의 내지 성장제일주의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구호가 주로 삶의 질에 대한 경제적 요소와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비경제적 요소에 대한 영향을 다소간 기대하고 있으나 그 기대는 크지는 않은 듯하다.

여러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보다 선진된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슷한 제도일 것을 알고 있다. 또 이러한 제도를 우리 사회에다 장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해관계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잘 알고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진정으로 해결하고 돌파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외면한 채 미사여구로써 근본문제의 공론화를 호도해 버리려고도 하고 있다.

삶의 질의 비경제적 요소의 중요성이 인식된 후에도 계속 경제제일주의 내지 성장제일주의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는 새로운 요소를 확보하려 하지 못한다. 그 결과 상호 모순된 것을 용인하는 불분명한 판단을 노출하고도 있는데 이러한 점은 여러 가지 단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나 교육개혁조치와 관련하여서도 나타나고 있고, 이른바 비자금문제와 결부되어 대기업을 어떻게 처우해야 하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의 양극화에 따라 나타나는 중소기업 문제를 푸는 방안의 선택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생산의 기본요소가 되는 노동과 자본의 조달과 관련하여서도 일관되지 못한 어정쩡함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조(self-help)와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설사 어떤 개혁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아서 가장 혁혁한 개혁조치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에 대해서조차 그런 개혁이 성장경제의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되지는 말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래의 성장제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균형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비리나 부정이 횡행하는 현실을 과감히 초극하면서 균형각각을 갖춘 정신세계와 가치관을 정립하여 국민들이 모두 주체적으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야 한다. 물론 이 점은 잘 알려져 있으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을 실제로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뼈아프게 번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경제성장 추구 이후의 비경제적 요인들을 배양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은 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길로서 이른바 기본소요(basic needs)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적절하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나 행동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교육기회를 갖추고 있어 세계에서 서너번째로 많은 대학생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질이 신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질적 개선을 위한 묘책을 발견해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른바 입시지옥이라는 말이 예시하는 바와 같이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지나친 노력이 주로 대학입시에 쏠리고 있으며 이 때문에 공교육비를 초과하는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고, 이러한 교육비의 부담이 거의 모든 가정에서 균형된 경제생활과 인간관계의 지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입시와 관련된 삶의 질의 부정적 요소를 극복하고 그로써 교육의 질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여 보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공고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의사는 논의에서는 보이는 경우는 있으나 그 이상 실제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자조의 정도(正道)는 교육체제를 확충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여야 함을 알고 있고 또 실제로 팔목할 만한 투자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하는 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투자를 실제화시키려고 하는 데에서는 충분히 적극적이지 못하다. 개혁조치가 무산되더라도 별로 흥분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로스쿨제도 도입시도의 실패에 대해 지극히 중립적이고 몰가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핵심이 되는 종합생활기록부제도가 정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두고 보자는 식의 제3자적 방관성향과 참을성을 보이고 있다. 배짱이나 요행으로 입학하게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점수가 높은 학

생을 궁극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복수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다소간 호의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대학에 들어온 후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다. 예컨대 교수와 학생의 비율이 다른 나라와 대비하여 어떠한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얼마 만큼의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이러한 태도의 이면에서 사법시험에 많은 학생들이 매달리고 있는 등 사람들이 지나치게 자격증을 추구하고 있고 진정으로 생산적인 인간으로 되려는 데 대해서는 소홀하고 있다는 점을 적당히 외면하고 있다.

기본소요의 핵심요인인 교육에 대한 관심의 내용이 이 정도로 불확실하고 소극적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덜 중요하고 덜 긴박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의료서비스, 교통서비스, 안전의 확보, 주거문제의 해결 등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실천적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교육서비스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개혁이나 로스쿨제도의 도입시도가 별로 현실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니 이러한 노력조차 없었던 의료서비스분야의 개선에 대한 평가에서 중립적 태도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주거문제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고 보고 있고, 고용문제도 그러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삶의 질을 고양시킬 기본소요의 요소를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것이 국가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는 듯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는 물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실업보험제도를 가지게 될 것을 원하고 있으나 실업자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택지를 국유화해야 한다거나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세금을 더 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지 않다. 그대신, 세금을 더 내지 않는 한 복지혜택을 증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 이면서, 이른바 무임승차를 바라고 있지도 않다. 결코 급진정책을 선호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하여 조세정책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다. 다소간의 이른바 사회복지정책을 구사하여 복지면에서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성장제일주의 관행의 지속과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변화 사이에서 분명한 결정을 하지 못함을 감지해 보았는데, 이는 여러 문제에 대한 생각에서 비일관성 내지 불철저성을 보이게 된다. 다음에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예를 살펴본다.



## 1. 금융실명제의 보완노력

개혁조치의 대표격인 금융실명제가 일차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은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면서 정확한 조세원을 파악하자는 것이고, 그 후 조세제도를 좀더 누진적인 것으로 바꾸고 보완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업을 이루어내야 하되 그것을 범세계적 추세인 간접세중심의 조세제도로 변환시켜 나가면서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는 철저히 못하고 무심하다.

금융실명제는 모든 비실명거래를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렇게 실명으로 파악된 금융자산과 거래내용을 근거로 하여 현행 세법에 의거하여 과세하는 것, 세법을 개정하여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 종합과세의 내용을 근대국가에 걸맞는 누진과세제를 포괄하게끔 조정보완하는 것 등의 여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93년 이래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제의 1단계 조치만을 보고 이러한 모든 것이 순차적이고 자동적으로 따라오리라는 것을 현재 확신할 수는 없다.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정한 금융실명제와 상응하는 금융실명제를 우리도 갖기 위해서는 마땅히 이상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게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조치는 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데에서조차 많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차명, 차명을 통한 사실상의 도명, 무기명의 금융자산을 방치하고 있고 이들의 실명화를 유도하고 강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1994년부터 3천만원 이상 예금된 은행통장을 가지고 있거나 무통장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에 대해 은행이 일제히 금융거래에 대한 명세서를 발송한 것은 1단계 조치의 한계를 벗어나 차명 등을 극복하도록 하는 전기로 될 수도 있다. 은행이 금융거래의 실질내용에 대한 것을 고객과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여 차명·도명거래의 여지를 줄이고 그로써 금융실명제의 조속한 정착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과연 이러한 조치는 지난 93년 시행된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금융거래명세의 통보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는 첫걸음으로 될 수 있다. 그것은 과거 문제되었던 모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실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명거래를

하다가 발각되었던 것과 같은 경우를 훨씬 많이 노출시킬 수 있어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계속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고, 그로써 차명과 도명을 이용하는 실명제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에서 실제로 채택된 제도조차도 그 통보대상을 크게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로서는 시늉만 한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금융거래의 명세를 통보하도록 했을 뿐 그러한 통보에 의해 사실과 다른 비실명의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러한 비실명의 상태를 조속히 지양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유인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자신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도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씌우므로써 도명자와 피도명자의 대립관계를 형성하여 결과적으로 비실명상태를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는 추가조치를 지니게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것은 단지 은행의 예금계정과 신탁계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물론 양도성 예금증서 등 무기명증권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범위가 크게 한정되어 있다. 은행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이 전체 금융자산의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조치는 금융거래의 통보에 의한 사실관계의 노출을 회피하는 금융자산 소지자들로 하여금 은행권을 이탈하여 비은행권으로 이동하게 하는 효과나 가질 뿐 하등 그것 본래의 목적인 실명제의 강화효과를 가질 수는 없다. 때문에 그것은 비은행권의 금융자산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약점은 속히 보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이의 보정에 그다지 애쓰지 않았다.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던 금융실명제가 지난 2년여 동안 별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 잠잠했던 이유가 현행 실명제가 그것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려했던 만큼의 실명제가 아니고 실명제의 이름만 가졌을 뿐 회피가 얼마든지 가능한 영성한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이를 외면하였다. 그로써 의도하는 목표와 그것의 달성을 위한 조치가 커다란 격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불철저성을 보였다. 개혁조치를 취하여 정말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국면전환의 필요에 따라 명색은 틀림없는 개혁조치이나 그 내용은 반드시 그러하지 못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 2. 비자금사건 처리의 불균형

삶의 질과 관련하여 경제적 단면과 비경제적 단면의 상대적 중요성을 인지하는 데에 우리가 가지는 불분명성은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사건이 터지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다시 한번 노출되었다. 형식논리로 보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은 전직 대통령의 비리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은 틀림없으나 동시에 그러한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불법자금을 공여한 재벌의 총수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른바 정경유착의 관계 속에서 정치인의 잘못과 경제인의 잘못이 섞여 비자금사건이라는 병적인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자금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물론 뇌물을 제공한 기업의 총수들도 함께 사법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과 기업의 총수가 충분히 분화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기업총수의 처벌은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중시의 사고방식에 따라 기업에 대해 위해가 되는 조치는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한다는 필요가 여기에 개재하게 된다. 그에 따라 정경유착을 끊는 중대사를 이루어내야 하겠다는 큰 당위가, 기업에 상해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보기에 따라서는 작으나 경제제일주의의 잠재적 관념으로 보아서는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당위와 상충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충문제에 대해 어떠한 하나를 선택하여 모순을 풀다는 식의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로써 정경유착의 문제 내지는 재벌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경유착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확실히 도입하여 장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경유착을 제도적으로 막아 보려는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

재벌문제 내지 대기업의 비리문제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식, 또는 좀더 일반적으로 말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실히 함으로써 정리될 수 있다.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개인 또는 소수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이 독립되게 하고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경영관계인의 충지를 기업내부의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집약한 다음 그것의 결과에 따라 기업을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오너가 밀실에서 불법으로 비자금을 공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현장에서는 오너들의 과단성있는 의사결정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아 오너의 전단적인 영향력을 제거하는 제도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놀랍게도 오너의 전단적인 힘이 배제될 경우 오너를 대신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최고위의 전문경영인 계층이 특히 오너의 영향력 거세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일본기업이나 미국기업에 비해 우리의 기업들이 근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사결정이 신속했던 때문이며 이렇게 의사결정이 신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오너들이 자기계산으로 위험부담을 가지면서도 과감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결정적인 계기의 이러한 결정을 전문경영인집단에 맡겼다가는 그렇게 신속한 결정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로써 근년 이루어낸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른바 과단성있게 미래의 위험을 부담하는 모험적 정신은 오로지 오너만이 지니고 있다고 보고 전문경영인은 지니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오너를 전문경영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뇌물죄의 다른 편 당사자인 재벌 오너들의 불구속이라는 보기에 따라서는 형평에 어긋난 조치가 내려졌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경제제일주의의 사고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수긍하고 있다.

### 3. 중소기업대책에서 혼돈

일반적으로 보아 중소기업이란 대기업에 비해 수가 많고 개체로서는 양적으로 소규모이고 질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도가 적지 않고 이것이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의 파멸이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행을 회피하려면 우리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중소기업과 여타 대기업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조성, 경쟁력을 제고하여 경제발전을 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근년 우리 사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자 구조개선대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대책은 중소기업자의 두 가지 큰 어려움을 자금조달의 문제와 인력확보의 문제로 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으로서 얼마 전부터 시행된 어음결제 대신 현금결제를 하는 것 등에 더하여 이번에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확충, 공제사업기금의 확충과 운영개선, 사업전환과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 보증요건의 완화 등 자금유통의 원활화, 표준소득률 하향조정 등을 통한 세금의 경감, 재래시장의 재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활성화 유도 등을 자금유통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여성 취업촉진과 보육시설 확충, 시간제 근로제의 활성화 등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의 조사에서 언제나 확인되듯이 자금과 인력확보의 문제는 중소기업자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제1, 제2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중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는 자금과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산업연관관계 속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대기업들과 협력·공존의 관계를 갖게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중소기업대책으로서 단지 자금과 인력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것은 불충분하다.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현상과 범위의 경제현상을 활용해 가며 대량생산을 하고 중소기업은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끔 관련되는 부품이나 원부자재를 공급해야 한다는 사정을 상기하면 단기적으로 애로라고 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의 장애를 제거해 주는 것은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상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관련 대기업의 활동과 함께 고려된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확대변환시킬 수 있게끔 대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어음결제 관행을 현금결제로 바꾸게 하여 유통성면에서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것 이상의 다른 신용공여 방식도 모색해야 하고 경영과 기술지도도 해야 하며 관련 대기업에 공급하고 남은 잉여생산품의 마케팅활동도 지원해 주어 기업경영 전반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의 수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는 월등히 많다. 대기업들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이런 협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기에서 이런 협조를 받는 중소기업의 수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효율화를 획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선정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은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한 시각을 좀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중소기업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본래 중소기업이란 많은 수가 계속 도산하고 또 많은 수가 생겨난다. 경제 사회의 근본상황 변화에 대해 대기업이 명맥은 유지하되 조직이나 주력 생산활동 등을 바꾸면서 변신한다면 부적합한 중소기업은 관련산업으로부터 퇴출당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통해 중소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도산하는 중소기업에 축을 두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직된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 중소기업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적극적이고 융통성을 지닌 시각을 가지고 중소기업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점점 서비스경제화해 가는 근본적 추세 속에서 대기업의 적응과 균형관계를 지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는 시각을 가지고 금번 마련된 구조개선대책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개의 중소기업이 부도나고 중소기업의 사장이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이상의 사려있는 대책은 그 근거를 잃게 되고 만다. 중소기업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해 계속 혼돈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나아가 기본적 생산요소인 노동을 수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혼란은 나타나고 있다. 즉 당장의 중소기업 등의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수생 명목으로 외국인력을 수입해 쓰려고 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 필요에 따라 이를 외면하고 있다.

#### 4. 교육개혁을 통해 추구하려는 이상과 그 허상

타율에서 자율로,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최근의 교육개혁은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것만을 보아서는 가히 획기적이다. 그것은 교육서비스의 수급에 있어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해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논리에 의거하면서 현장의 다기한 서비스수요자들의 요망을 흡수해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논리를 활용해 보려는 의도는 총론에서나 확연할 뿐 실제 적용의 구체적 사례에서는 철저하지도 못하고 모든 사례에서 총체적으로 지탱되고 있지도 않다. 때문에 개혁안의 미비점은 교육부에 의한 실천방안 구체화단계에서 반드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개혁은 위에서 적시한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 및 고교설립의 준칙주의, 규제완화위원회의 설치, 지방교육자치제

도의 개선 등의 방도를 가지고 실현해 보려고 하고 있다. 과연 이들은 모두 교육의 자율화·다양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고, 수요공급의 양상을 종래의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이러한 요인들이란 우리 나라 교육서비스시장의 수급양상을 단지 한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이 종래의 근본적 수급불균형을 본원적으로 시정하고 개혁안의 이상을 실현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안의 시행만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시점에서 보아 70만명이나 되는 일류대학에 대한 잠재적 지망자를 대학입학시점에 이르러 세칭 일류대 정원인 2만명 내외로 줄일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한 대학의 다양화라든가 고교 및 대학의 수를 늘리고 운영의 융통성을 허용하는 정도의 한계적 방안만으로 교육서비스시장의 근본적인 수급불균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교육개혁심의위원회의 지난 제안을 보고 종합생활기록부의 도입과 더불어 야기될 수 있는 교사의 과중한 부담과 교사처우개선의 미흡 사이에서 불균형을 적시하였고 종합생활기록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기도 하였다. 나아가서 그것을 치맛바람과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고교간·지역간 차이를 정당히 반영해야 하는 과업과 관련된 형평성 확보의 문제도 제기하였고 각개 대학에 의해 결정될 선정기준의 공정성과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자의성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대학의 수를 늘려 대학 입학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일류대를 향하는 경쟁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조치이다. 자원봉사 등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종래의 국·영·수중심의 학습태도가 앞으로는 일류대 입학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못되게끔 바꾼다 하더라도 결국은 입시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되어야 하는 일류대 선발기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류대 입학경쟁이 벌어지게 되리라는 것은 적어도 현재의 수급불균형의 상황을 놓고 볼 때에는 피할 수 없는 사정임을 직시해야 한다.

수급사정을 경시하고 이상만을 추구한 이번 교개심의 제안은 6년 후 일류대 잠재 경쟁자를 120만명까지 될 수도 있게 한 것이나 구체적 사업을 제시함이 없이 교육재정으로 GNP의 5%를 보장하라고 주장한 것이 예시하듯 전혀 철저하지 못하다. 때문에 그것은 차후 실제화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보강되어야 한다. 우선 근본적 수급

불균형의 사정을 인정해야 하고 그 다음 그러한 불균형의 정도를 시간을 두고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의식에서 실제적으로 불균형을 줄이는 구체적 방안을 성안해 차근 차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볼 때 교육개혁안은 현실을 너무 벗어난 이상을 쫓고 있다고 본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는 한 그것의 이상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어떤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허상을 깨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차원에서 삶의 질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여전히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5.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해석의 비일관성

얼마 전 대법원은 노사간 사전합의가 달리 없었을 경우 무노동에는 무임금이라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2년여 전 시끄러웠던 쟁점에 대해 최종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문리적으로 보아 하등 타할 것이 없다.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무노동이어서 무임금과 상응하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어 원칙의 천명과 원칙의 구체적 집행 사이에는 다시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개재하게 될 여지가 크다.

일용직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노동과 무노동을 구별하는 데에 하등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장기간 고용되어 있으면서 월급이나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무노동인지를 판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근로현장이 이른바 포드주의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만큼 단순명료한 것이고 각개 근로자에 대해 그의 업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무노동인지 여부를 판별하기가 쉽겠으나 오늘날의 대부분의 근로현장에서 노동은 대체로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근년 우리 사회의 근로현장에서 각자가 창의성을 발휘하여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가 더할 수 없이 크다는 사정을 상기하면 노동과 무노동을 구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무노동인지 여부를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그것에 대해 과감히 무임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몇 가지 전제조건을 지닐 때 무리없이 조성될 수 있다. 첫째, 근로현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주가 대등한 위치에 있고 서로 이견을 갖게 되어 분쟁에 빠



저들게 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대등한 투쟁수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둘째, 무임금이 되더라도 생계가 위협받지 않게끔 공식적인 사회보장의 장치가 있거나 가족관계 등을 통한 사실상의 사회보험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경제사회의 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노사대립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무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미국과 같이 기업을 기업주가 독자적인 노력으로 수성한 것이어야 하지 독일처럼 전쟁을 통해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전전의 오너의 노력만이 아니라 종업원 모두의 노력의 결실에 의해 기업이 재건된 경우는 아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또 우리가 현장의 기술자와 기능인들의 창의적 노력에 의해 기술발전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선진사회로 도약해 가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인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노사분쟁이 별로 일어나지 않게끔 제도개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성공시의 성과는 기업주에게 전폭적으로 돌아가나 실패시의 부담은 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성과배분에서 비대칭성을 시정할 수 있게끔 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인 사외이사제도, 근로자의 경영참여제도, 기업내외에서 감사활동의 충실화와 강화, 내부통제제도의 확충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근본요인들에 비해 보면 노조전임자의 축소나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폐지 등은 사소한 개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특히 종래의 한국노총 외에 민주노총이 새로 생겼다는 점을 보아 이러한 성격의 제도개선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노사분쟁이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여러 경우에 대해 무노동으로 되는 경우를 미리 식별하여 놓고 이러한 때의 처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준비해 놓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노동현장의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지침의 지도원리는 노사의 대립감정을 빨리 시정하고 생산활동의 갱생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 해당 기업이 전망이 밝은 기업인지 또는 사양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 감안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의 실질이 일용노동과 근사한 것인지 아니면 사주와 근로자의 현장에서 일체감이 중요하여 이른바 노동조건에 대한 명세서나 지침으로는 부족하고 기업문화를 정립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것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어느 경우라도 노동운동이 경직되어 직장파괴가 되고 경제 전체의 구조조정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사양산업의 근로자들은 시급히 해당기업을 벗어나 재훈련을 받은 다음 다른 기업에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재교육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대비를 못하는 한 과거의 경제제일주의 관념에서 벗어나 좀더 고양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게끔 변신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신을 과연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

## 6. 자본도입에 대한 인식의 파행성

국민경제 전체를 감안하면 마구 자본을 도입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해외시장에서 썩 이자율만을 보고 무조건 자본자유화를 요구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흔히 달러나 엔화로 측정된 이자율을 우리 원화로 측정된 이자율과 직접 비교하여 그 높낮이를 말하곤 한다. 그래서 미국의 이자율이 6%이고 일본의 이자율이 4%인데 우리의 이자율은 12%임을 적시한 뒤 우리의 이자율이 이들의 이자율보다 각각 6%와 8%나 높다고 말하는 식의 잘못을 범하고는 한다. 이런 잘못을 범할 때 이자평형의 정리(interest parity theorem)가 밝혀 주는바 이종통화(異種通貨)로 표시된 이자율 사이에는 이들 사이의 환율변화율의 예상치 또는 환위험요인(exchange risk factor)과 외환시장 밖의 요인을 반영하는 정치적 위험요인(political risk factor)이 개재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즉 일본의 이자율이 4%이고 우리의 이자율이 12%이지만 이 둘 사이의 차인 8%가 예컨대 환율변화의 예상치 4%와 정치적 위험요인 4%를 반영하고 있으며, 때문에 외환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본요소들이 변하지 않고 정치적 위험요인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격차는 없어질 수 없다는 가능성은 별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자본도입이 자유로워져서 많은 자본이 유입된다면 일시적으로는 국내의 자금시장에서 자금공급이 자금수요를 능가하게 되어 우리의 원화로 측정된 이자율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머지 않아 환평가의 하락이 예상되고 정치적 위험차원에서 위험도의 증대가 인지되어 우리의 이자율이 다시 일본의 엔화로 측정된 이자율과 8%의

격차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외면된다. 한마디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관찰되고 있는 바 예측가능한 외국투자로부터의 과다수익의 수수께끼(predictable foreign investment excess return puzzle)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외국의 자본을 들여다 쓰는 나라임을 감안할 때 우리 나라의 이자율이 투자국에서 이자율과 환율의 변화예상을 외에 투자자들의 모국이 아니라는 사정에 기인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기에 외국에서 그 나라의 통화로 측정된 이자율과 단순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은 관심 밖에 두고 있다.

실상 국제금융시장이 모두 통합되고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화될 때 국가간에 균등화되어야 할 이자율이란 명목이자율이 아니라 실질이자율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보아도 위에서 적시한 것처럼 우리의 이자율 12%와 일본의 이자율 4%의 차이를 보고 자본자유화를 하여 그곳에 개재되어 있는 격차 8%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러한 12%나 4%로 예시된 이자율이란 명목이자율이다. 이들은 각각 자국의 실질이자율에다 자국의 인플레이션의 예상률을 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장기균형상태를 생각하고 구매력평가설을 상기해 보면 양국간의 인플레이션율의 차이는 양국간의 환율의 변화율과 같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명목이자율과 일본의 명목이자율을 각각  $i$  및  $i^*$ , 우리의 실질이자율과 일본의 실질이자율을 각각  $r$  및  $r^*$ , 우리의 인플레이션율과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을 각각  $p$  및  $p^*$ , 두 나라 사이의 환율의 변화율을  $e$ 라고 하면,

$$\begin{aligned} i - p &= r \\ i^* - p^* &= r^* \\ p - p^* &= e \end{aligned}$$

가 성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두 나라 사이에서 실질이자율이 같아야 한다는  $r=r^*$ 의 조건은 결국  $i-i^*=e$ 와 같아지게 된다. 두 나라 사이에서 명목이자율이 같아져야 할 이유가 없음이 다시 확인된다.

자본코스트를 낮추기 위해 자본자유화를 요구하는 입장은 또한 우리가 자본을

도입하기로 할 경우 무한대 내지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그때 주어져 있는 이자율에서 도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의 자본도입 규모가 증가할수록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자로서 우리의 위험도가 높게 평가될 것이고 그로써 추가 자본도입에 대한 이자율이 차차 높아지게 된다는 점 즉, 해외시장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금공급곡선이 우상향의 정규 공급곡선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국제금융 시장에서도 신용배급의 현상이 있다는 사정은 외면되고 있다.

우리가 자본을 도입하려 할 때 해외의 자금공급곡선이 우상향의 모양을 지니지만 우리 차입자 중 다른 차입자에 앞서 먼저 자본을 도입하는 차입자에 대한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나 나중에 도입하는 차입자에 대한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한편 이들 이자율은 모두 이른바 한국경제의 신용도에 근거를 두고 결정된다. 따라서 자본을 도입하려는 기업들 사이에서는 초기에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때 다른 기업보다 먼저 차입하려고 하는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길은 각개 기업체로 하여금 남보다 먼저 싼 이자율의 자금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쟁을 수수방관하고 방임하는 것이기보다는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해외 자금공급곡선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에게 적절한 정도의 자금을 도입하여 그것을 우리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토지가 비싸고 임금이 높고 이자율이 높아 경쟁력을 지니게 되는 데 장애가 많다는 불평이 적지 않다. 이러한 불평은 즉각 금리인하를 요구하거나 자본자유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위의 논의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피상적이고 단편적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반목하다가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막게 될 것임은 물론 경제성장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이견, 오해는 공개적 토의를 통해 시급히 해소되어야 하나 우리는 이런 문제도 분명히 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는 파행성을 보이고 있다.

#### 4. 지방자치와 지역엘리트의 성격

경제적 가치를 삶의 질의 선행요인에 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을 향유하게 된 후에도 여전히 경제적 가치를 크게 중시하여 그것과 비경제적 삶의 질의 요인이 상충될 때 선택에 혼돈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은 일반국민과 대비하

여 지역엘리트만을 독립적으로 보아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지방화현상은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지방공무원 및 지방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지방의 이해에 민감하게 된 사람들이 상당수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나타나 지방의 이해에 대해 관심을 심화시키고 그것의 증진을 위해 애쓰게 되었다는 것은 종래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던 때 중앙에 의해 부당하게 무시되어 왔던 지방 고유의 가치와 독자성을 회복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향이 지나치게 되면 과도한 분권화와 지역할거주의가 대두하게 되어 경제 전체의 유기성과 효율성을 잃게 될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특히 지방정치인이 재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지역제일주의로 일로 매진하게 되는 경우 이런 전체 무시의 경향은 상당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조화가 무시된 채 경제사회 전체를 고려해 중앙에서 다루어야 할 일과 지역의 특성과 이해를 반영하여 지방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 서로 구획되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모든 일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결정없이 계속 연기되는 딱한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다. 서울시에서 시세인 담배세와 구세인 재산세를 교환함으로써 여러 구 사이에서 세수입의 격차를 줄이고 서울시 전체의 효율을 증대시켜 보려던 노력이 재산세를 잃게 됨으로써 손해를 보는 일부 구의 반대와 이를 지원하는 중앙정치에 의해 무산된 것이 이를 예시한다. 전체와 부분 사이에서 과거의 불합리를 시정해 보려는 데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면서 전체적 조화를 망각한 채 아전인수격의 논리만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어떤 잘못도 시정되지 못하는 현상유지 또는 현상고착의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는 지방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지방에서 필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좀더 폭 넓게 제고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통상 지방정부는 지방에 필요한 일을 실제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수행할 수단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확대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나 아직 우리 나라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본 지방과 중앙 사이의 갈등현상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고려 내지 기대를 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는 분명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민주화를 진척시켜 나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풀뿌리민

주주의도 배양해 나가야 하지만 그것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변형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당연한 협력관계를 가로막는 것으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아마 종래 민주화와 결부된 정치적 삶의 가치가 무시된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최근에 들어 민주화가 가능하게 되자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보장하는 개별인자의 권리를 전체적 조화를 의식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개별인자들이 단기적인 자신의 이익을 쫓는 행위에 과잉 몰입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민주적 가치의 억압에 대한 반동으로서 과잉 반응하게 된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과잉반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해결되었지만 얼마간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만은 틀림이 없다.

## 5. 전망과 대책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고도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어선 현재에는 비물질적·정신적 가치에 대한 욕구가 그러한 물질적 성장의 정도 이상으로 가속화되어 증대되어 왔다. 이렇게 되면 소득 내지 경제생활과 관련된 삶의 질에 대한 한계효용은 떨어지게 된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성취감이나 행복감과 같은 비경제적 가치, 특히 정치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지방분권에 따르는 과도한 지역이기주의의 추구도 자제될 것이고 민주주의가 좀더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환경, 복지, 소득분배, 노사관계 등에 대한 종래의 관념도 달라지게 된다. 세대간 인구구성이 바뀌고 상대적으로 유복한 상태에서 태어났으나 현상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는 경제적 재화는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더욱 촉진될 것이다. 이른바 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경쟁라운드 등에 의해 밖으로부터 압력이 있게 되고 우리 생활의 여건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이전의 성장제일주의적 사고방식과 그것을 밑받침하는 제도를 고수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외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도 적응해야만 하게 된다.

세대구성이 달라지고 부에 대한 지배력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가지지 못한 사람(have-not)의 수가 가진 사람의 수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됨에 따라 앞에서 적시된 미진한 행위나 모순된 행위에 대한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떠오르게 된다. 종래보다 훨씬 다기다양한 가치가 중시되고 추구될 수 있을 것이며, 중앙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개된 사회로 이행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구미 자본주의 경제에서 볼 수 있듯이 연예인이나 체육인들이 이른바 스타가 되고 많은 소득을 얻는 양상도 전개될 것이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순리에 맞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른바 선진사회로 이행이 구체화될 수 있게 된다.

우선 경제활동, 특히 소비형태를 환경친화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국내외적으로 성장제일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잘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경제활동의 양식을 바꾸어야 하겠다.

지역공동체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 사회에는 과거 농경사회시절에 존재하던 공동체가 없어지게 된 다음 일부 종교단체를 통한 사실상의 협동관계와 학연, 지연, 혈연, 직장연 등을 통한 의사공동체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되기도 하는데 인간의 삶의 본래적 형태인 땅을 바탕으로 하는 어우러진 삶의 본태(本態)로 돌아가기 위해 공동체 및 공동체생활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겠다.

고양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처럼 여러 다양한 가치를 서로 수용하고 또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데서 이용하게 되는 시설 등 하부구조를 마련해야 하겠다. 훌륭한 문화활동을 보고 즐기며 그에 따라 이러한 문화활동을 자연스럽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극장, 무대 등 하드웨어를 많이 마련하는 외에 문화창조를 위한 분위기나 여건 등 소프트웨어도 배양하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 나라처럼 교육받은 여성인력, 특히 고급의 여성인력이 경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고 또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비경제적 가치의 창달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한다. 우선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율이 낮고 고급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기도 않다. 여성들은 자녀들의 교육이나 각 가정의 재산관리 등의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은 잘못하면 기왕에 주어지지 있는 단기에서 고정된 크기의 파이를 나누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제로섬게임의 의미를 가질 뿐 하

등 생산적인 것으로 되지 못할 여지가 많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UNDP(유엔개발계획)의 여성 평등지수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여성들은 세계 113개국 중 90위를 차지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제도적 또는 관행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아프리카의 최빈국이나 회교권의 나라들과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정의 가구주가 생활을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데 거의 전적으로 노력해야 하므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 나라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세계 제일이라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이러한 인식 내지 각성은 단순히 앞으로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지정책을 좀더 폭 넓게 펴나가야겠다는 정도의 태도변화만을 가지고는 우리 사회를 경제적·비경제적 가치를 골고루 갖춘 사회로 만들 수 없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현재의 불균형을 심각하게 인식한 다음 그것을 시정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가 지니게 되는 과제는 어떻게 함으로써 구미 선진사회와 같이 선진사회에 합당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게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하드웨어 관련 사회하부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사회하부구조에서 수없이 많은 제도를 결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장안하여 장치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자원의 투입을 요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해 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키게 하는 근본적 대응이 된다.

경제발전과 여러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이른바 영국병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근로의식이 낮아지고 많은 사람이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리려고는 하면서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데서는 게으르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는 이러한 영국병에 대한 우려로부터 다소간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고 보나 이러한 가능성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다.

어느 사회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은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 정치지도자는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다음 각기 자신의 조그만 이해관계에 매달려 있기 쉬운 모두를 설득하여 이들 각각의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른바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금권정



치, 정치의 경시와 무관심의 전통에서 정치가들은 이러한 성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가들 중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볼 때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클 수는 없다. 그들은 국민 모두와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구호 이상의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5여 년 간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권위주의적으로 지배되어 온 정치적 현실을 살아온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성격의 과거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명예를 지닌 정치인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정치의 장에서 이러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절명의 필요라고도 할 수 있기에 마냥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여러 다른 차원에서 다기한 가치가 발견되고 숭앙되어 경제적 가치가 과도하게 중시되었던 종래의 반신불수적 가치체계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은 항시 사회병리현상을 적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지를 모아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언론은 선봉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은 과거 권위주의시대를 거치면서 별 상처없이 온존해 올 수 있었고 또 문민시대에 들어서서는 이른바 구시대의 비리를 척결하는 사정작업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때문에 현재 언론은 우리 사회 최고의 기득권집단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변화하는 사회의 전환기에 서서 언론이 과연 마땅히 해야 할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의심하고 있다. 우리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의 이러한 곤궁한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어야 한다. 언론이 변신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의 배부른 언론이 이러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신은 정부의 주도적 선도에 의해 시발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기업의 동조노력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과 더불어 각종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하겠다. 비경제적 삶의 질의 요인은 경제적 삶의 질의 요인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무형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갖추려는 과업을 수행해내려고 하는 데에 정부와 기업이라는 공식기구의 활동만으로는 결코 충분할 수가 없다. 이를 보완하는 민간의 자발적 활동이 있어야 하겠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는 우리 나라의 시민사회 활동이 다른 나라의 그것에 상응하게끔 강화되어 공식적 노력을 보강하고 그로써 공식적 노력과 비공식적 노력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도록 제도화시킬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각종 지역사회에서 추구하는 비경제적 가치가 반드시 동일한 것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다원가치의 사회에서는 각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는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단연 필요하다. 단 이러한 점에 대해 우리가 낙관할 수는 없다. 이번 15대 국회의원선거가 이 점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분석의 한 면은 전국적인 인물이 당선되지 못한 반면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고 지역의 이해에 좀더 충실했던 사람들은 좀더 수월히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국회의원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정치를 해야 하고, 지역의 이해를 반영하여 지역사회를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되게끔 키우는 일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역정치인들의 소임이어야 옳다. 하지만 이번의 결과는 중앙정치인과 지방정치인의 차별화를 무의미하게 하였고 중앙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중앙의 전체적 고려를 소홀히 하게 될 가능성을 크게 열어 놓았다. 이러한 양상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현재의 구조에서는 쉽게 시정되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등 제도의 변화가 없이는 삶의 질의 균형된 추구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 하겠다.

abstract

---

## Democratization,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Chon-Pyo Lee

Koreans consider economic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reasonable consumption as the basic factor of the quality of life. Koreans regard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second to economic well-being. Hence, protection of environment, purporting of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mposition of restraints on big businesses and so on are not expressly supported under the tacit understanding that these measures could be harmful to economic development. This attitude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bserved in developed societies, where bigger weights are given to non-economic value and sustainable growth.

As Korean economy develops and regional autonomy is to be upheld with the internal substantiation of democratization, Koreans would be changed to be similar to other developed and more democratized countries. They would give more importance to such concerns as environment, social welfare, income distribution, and labor relations. Demographical transformation involving more younger generation together with external influences associated with so called green round, blue round, and competition round will surely alter the growth-dominated attitude thus far discovered these 30 years or so.